

SAe.a.12

제2회 기사연 통일마당

“김정일 체제의 출범과 남북정상회담의 과제와 전망”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35번지
서울충정로우체국 사서함 33
120-012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35 Choongjeungno 2 Ga
(Choongjeungno P. O. Box 33)
Sodaemun Ku, Seoul 120-012
Korea
Tel : 312-3317-9 FAX : (02) 313-0261

- 일 시: 1994년 7월 19일(화) 오후 2시~6시
- 장 소: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CISJD)

제2회 기사연 통일마당

"기상상회담, 1994년" → 1994년.

“김정일 체제의 출범과 남북정상회담의 과제와 전망”

• 사회: 강문규(대한 YMCA 사무총장, 본연구원 이사장)

>순서<

- 2:00-2:30 기도와 인사 및 소개
- 2:30-3:40 주제 발표
- 3:40-3:50 휴식
- 3:50-4:50 토론자 발표
- 4:50-6:00 종합토론 및 폐회

• 발표

- ▶ 김정일 권력의 성격과 대내외 정책전망 - 김남식(평화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 남북정상회담과 평화체제의 실현 - 이삼열(숭실대 교수)
- ▶ 정상회담의 지향: 합의서 이행과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 강정구(동국대 교수)

- 토론: 박정수(국회의원, 민자당)
- 조순승(국회의원, 민주당)
- 이창복(지구평화통일 민족회의 공동의장)
- 장기천(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장)
- 김윤옥(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원장)

- 일시: 1994년 7월 19일(화) 오후 2시~6시
-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원장: 박상증 목사)

김정일 권력의 성격과 대내외 정책 전망

김 남식 (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1. 머리말

김정일에 의한 권력의 승계(당총비서, 국가주석)는 권력의 공백과 과도체제를 거치지 않고 단시일내에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이는 그 간 김정일에 의한 후계체제 구축작업이 빈틈없이 잘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김정일의 권력승계는 수령의 승계로서 김일성 수령이 개척한 「사회주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일 권력은 김일성 시대의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를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내외 정책도 이미 김정일의 주도하에 추진되었고 그를 집행해 나가는 실무자들도 김정일의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부상된 인물들이라는 것을 생각할때 기존의 대내외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핵문제와 남북정상회담등 현안문제들도 시간조정이 있을뿐 큰 차질없이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과거 냉전시대와는 달리 경제의 협력과 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해 가고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정세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제화와 개방화 시대를 맞아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이에 적용하

는 발전방향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국제관계의 흐름과 변화는 김정일 정권으로 하여금 보다 대담한 개혁과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은 기존의 대내외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상황적 요구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2. 권력의 성격 - 76년과 78년의 권력 변화

1) 승계체제의 구축

김정일에 의한 권력승계작업은 20년전부터 시작되었다. 1973년 당 5기 7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은 조직.선전담당비서로 선출되었으며, 다음해인 1974년 2월에 개최된 바 있는 당 중앙위원회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으로 추대되었다. 김정일에 대한 이러한 당 중앙위원회와 정치위원회에서의 추대는 비공개적인 것이었으며, 항일빨치산 출신들인 혁명1세대가 주동이 되어 김정일을 후계자로 추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당적지위를 통해서 김정일은 사회주의 건설을 지도해 나갔으며, 3대혁명소조라는 친위대를 조직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추진하고 자기의 권력기반을 구축해 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의 경쟁운동으로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전개했으며, '속도전'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주의 경쟁운동을 전개했다.

1980년 10월에 개최된 바 있는 노동당 6차 대회에서는 김정일이 정치위원, 당 비서 그리고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등으로 선출되어 김정일이 조선노동당을 실질적으로 장악 운영하며, 수령의 후계자라는 것을 공식화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6

차 당대회부터는 김정일의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부상은 물론 그의 활동영역이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 것이다.

소련과 동구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사회주의를 고수해 나가는 문제와 함께 김정일에 의한 권력이양작업들이 추진되었는데 김정일은 당과 국가, 군의 수위에서 후계자로서의 권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1990년 5월에 개최된 바 있는 최고인민회의 제 9기 1차회의에서는 김일성의 유일적 영도체제와 함께 김정일의 후계체제를 보다 확고히 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김정일을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추대했다.

1991년 12월에는 노동당 6기 1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을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9기 5차회의에서는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는 것은 권력구조상의 지위가 보다 격상된 것이며, 김일성 권력의 일부를 부분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김정일의 지위격상과 함께 사상이론가로서의 이미지 부상에도 주력했다. 1991년 5월 5일에는 당 책임간부들과의 담화에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라는 제하의 담화를 발표하여 북한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성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이론적으로 정식화했는데 92년에도 두가지의 지도이론을 제시했다. 92년 1월 3일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 앞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노선」이라는 제목으로 담화를 했다.

92년 10월 10일 당창건 47주년에 즈음해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 문제에 대하여」라는 제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93년 3월 1일 노동당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에 「사회주의에 대한 궤방은 허용될

수 없다」는 논문을 게재했다.

이러한 몇가지 지도이론들은 종래에는 김일성 주석만이 제시할 수가 있었는데 그를 대신해서 김정일이 하게 되었다는 것은 북한사회주의 건설을 김정일이 실질적으로 지도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김정일에 의한 권력승계작업은 20년 이상 추진되었으며, 따라서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권력의 공백기 또는 과도체제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새시대의 수령으로서의 모든 권력행사를 하게 된 것이다.

2) 권력의 성격

김정일의 권력은 김일성 시대와 같이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라고 성격지을 수 있다. 수령중심의 영도체제에 대해 북한에서는 '수령의 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며, 수령의 사상과 명령, 지식에 따라 전당, 전국, 전민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체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수령중심체제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지도사상으로 되어있는 주체사상에서의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라고 할 수가 있다. 혁명적 수령관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보면 북한의 권력구조는 수령중심체제로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수령은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를 창건하고 혁명전통과 당의 지도 사상을 창조한다. 당이 노동계급의 계급적 조직의 초고 형태라면 수령은 당의 최고 지도자이며,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총체를 영도하는 전체인민의 통일단결의 중심이다. 수령이 없는 당이 있을 수 없으며 수령의 영도가 없으면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이 승리할 수 없다.'

이러한 수령중심체제는 1960년대 후반에 구축되기 시작했으며, 그 후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이 채택되어 국가주석으로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수령중심의 권력구조가 확고히 수립된 것이다. 한편, 수령중심의 권력구조는 수령, 당, 대중의 삼위일체라는 사회주의적 집단주의 체제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집단주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3대요소인 수령, 당, 인민대중은 서로 밀접하게 결합된 유기체이고 전일체적인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수령 : 당과 노동계급, 인민대중의 최고뇌수,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유일한 영도자.

당 : 수령의 혁명위업 실현의 정치적 무기이며, 계급의 선봉대, 대중의 향도적 역량

인민대중 : 역사의 주체이며 수령과 당의 영도밑에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심각하고 복잡한 혁명수행을 담당하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

이러한 수령, 당, 대중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북한의 권력구조는 수령중심의 유일적 영도체제, 그리고 노동당의 영도적 지위와 역할 등을 절대시하는 것으로 형성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수령중심의 유일적 영도체제, 그리고 노동당의 영도가 확고히 보장되는 권력구조는 다름아닌 김정일이 권력승계·작업과정에서 철저하게 이루어 졌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김정일 권력은 그를 중심으로 한 수령중심체제로 된다는 것, 그리고 김정일을 수령으로 호칭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 하겠다.

3. 대내외 정책 전망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의 권력은 수령중심체제라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김정일에 의한 권력승계는 바로 수령의 승계를 의미

하는 것이라 하겠다. 북한에서는 수령후계자에 대해 『수령의 사상과 업적으로부터 수령의 사업방법, 작풍, 품격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받아안고 수령의 대를 이어가는 당과 인민의 지도자이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계승하고 끝까지 완성해 나가는 미래의 수령』으로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수령의 후계자의 자질에 대해서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최고귀감으로 되어야 하며, 수령의 혁명사상과 탁월한 영도예술,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을 완벽하게 체현한 가장 걸출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 또한 수령과 후계자와의 세대적 관계에 있어서는 같은 세대가 아니라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와의 관계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래야만이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의 대를 이어 계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해서 김정일을 김일성 다음의 수령으로서 준비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간 북한에서 추진해온 김일성 시대의 모든 대내외 정책은 그대로 계승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1) 대내정책

① 우리식 사회주의 노선의 강화발전

북한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그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총노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주체사상을 구현해 나가는 사람중심의 사회주의라고 규정짓고 있다.

이러한 『우리식 사회주의』는 1991년 5월 5일 김정일의 담화에서 이론적으로 정식화 되었는데 그 내용을 간추려 본다면 첫째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그에 대한 사상생활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 둘째 권력구조에 있어서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와 당의 영도를 확고히 견지해 나간다는 것, 셋째 경제에서는 시장경제를 배격하고 계획경제를 실시하며 생산수단을 모두다 인민적 소유로 전환한다는 것,

넷째 자립경제노선과 대안의 사업체계의 관리방식을 계속 고수한다는 것, 다섯째 외부의 사상문화의 침투를 차단하고 사상사업을 강화한다는 것, 여섯째 수령.당.인민대중의 삼위일체를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그간 북한에서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해 나가는 문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그를 지키기 위한 『사회주의 지키세』라는 노래가 보급되었으며, 『지키면 승리요, 버리면 죽음이다』라는 정치적 구호와 함께 『사회주의는 우리인민의 생명이며 생활이다』라는 것으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해 나가는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② 새로운 경제전략의 수행

현재 북한에서는 완충기의 전략적 과제로서 농업, 경공업, 무역제일주의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해 12월 8일 노동당 제6기 제21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고 3차 7개년 인민경제계획(87-93)을 총결산하고 앞으로 2~3년간을 완충기의 전략적 과제를 토의.결정한 것이다.

당전원회의에서 강성산 총리는 3차 7개년 계획의 총결보고에서 당초 설정했던 목표달성에 크게 미달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이유를 『90년대에 들어와서 잇달아 생긴 중대한 국제적 변화와 복잡한 사태가 사회주의 건설에 큰 장애와 난관을 조성했다』고 전제하고 첫째 사회주의 시장의 붕괴에 따라 그들 나라들과의 경제협력과 무역거래가 부진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둘째 한반도 정세의 첨예화와 전쟁위험의 증대로 방위력 강화에 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전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등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와같이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경제성장 속도의 조절, 경제규모의 축소, 자력생존의 경제구조 완비,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

고, 대외경제 관계의 방향전환등을 밝히면서 앞으로 2~3년간을 조정 기간으로 설정하고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의 전략적 방침을 제시했다. 특히, 수출생산기지의 정비와 수출품생산 확대 강화, 대외시장의 적극적 대체등 대외무역의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2~3년간 농업, 경공업, 무역등의 발전을 위해 모든 경제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한층 높이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며, 체제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가 있다.

그간 북한에서는 소련, 동구사회주의 붕괴후 우리식 사회주의를 이론적으로 정식화하고, 그를 지키는 문제를 가장 기본적인 과제로 추진해 왔는데 체제고수에 있어서의 어려운 고비는 일단 넘긴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토록 하는 사회주의 건설의 방향을 설정했다고 볼 수가 있다.

지난 4월에 개최된 바 있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이와같은 완충기의 3대전략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토의한 바 있다.

③ 제한적 경제개방정책의 추진

북한은 그간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추구하면서 대외경제협력에 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정책을 추구해 온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사회주의 경제질서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심스럽게 대외개방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경제개방화를 위해 「외국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보장규정」을 신설하였고, 그리고 외국인, 외국법인과의 기업경영과 합작을 장려하는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북한의 경제개방화 조치는 1984년 9월 합영법을 제정함으로써 조

총련을 비롯한 일부 서방국가들이 북한과의 경제합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의 성과는 여러가지 제한된 여건으로 인해 극히 부진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90년도에 들어서면서 수출제일주의를 부르짖으며 수출확대에 총력을 경주하게 되었고, 외국인 합작과 시설투자유치를 위해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는 한편, 각종 법령 등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즉,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 74호로 경제건설을 촉진시키며,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무역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를 위한 결정문을 채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북한의 함경북도 나진,선봉지구의 총 621평방킬로미터의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한다는 것, 둘째 자유경제 무역지대내에서 북한의 관계기관 승인하에 외국인에 대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 투자기업등 각급 형태의 기업설립과 운영 및 각종 서비스 사업종사가 허용되며 자유경제 무역지대내에 있는 나진 및 선봉항과 인접지역인 청진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한다는 것, 셋째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 다른나라 사람들이 투자한 자본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하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창설운영되는 기업체들의 투자성격에 따라 관세와 소득세의 감면을 비롯한 여러가지 특혜와 편의를 보장한다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북한은 이러한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함과 동시에 UNDP하에 추진되고 있는 남북한, 중국, 몽고, 러시아등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려 하는 두만강 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북미고위급회담이 성사되어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일본과의 수교회담도 진행될 경우 대서방국가들과의 경제교류협력은 활발해질 것이 예상된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신뢰구축이 조성되고 화해와 협력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남북교류협력

은 급진적으로 발전될 것이 분명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지금과 같은 제한적인 경제개방정책을 넘어서서 보다 광범위한 방향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2) 대외정책

북한의 대외정책은 자주, 평화, 친선이라는 3대이념하에 추진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자주이념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오늘의 시대를 자주의 시대로 규정하고 자주의 실현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제국주의 세력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데서 대외활동의 기본은 국제적 규모에서 반제자주역량을 강화하는 문제라 하겠다. 그러기위해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제3세계 나라들과의 유대강화, 그밖의 평등호혜의 입장에서 자본주의 나라들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정책의 기본노선은 김정일 권력에서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통일의 환경조성을 위하여, 또한 북한사회주의 체제의 견지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일본과의 수교회담을 성사시키고 소련과도 관계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북미고위급 3단계 회담이 개최되고 또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 두가지 문제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 될 수 밖에 없으며, 한편으로는 남북정상회담이 무산되는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가지 현안문제는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김정일 체제는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로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김정일에 의한 권력승계 구축을 일찍부터 서두르게 된 이유의 하나가 김일성 주석의 사망후에도 기존의 정책들을 수정 또는

중단함이 없이 일관성있게 계속해 나가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의 사상과 업적으로부터 수령의 사업방법, 작풍, 품격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받아 안고 수령이 이어가는 당과 인민의 지도자이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 위업을 계승하고 끝까지 완성해 나가는 미래의 수령」이라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둘째 김정일은 일찍부터 당의 총비서와 정치위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총비서인 김일성을 대신해서 당사업을 지도해 왔으며, 사회주의 건설은 물론이고 대외정책 또는 인사문제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지도해 왔다. 최근에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된 핵문제를 비롯한 대미,대일정책, 그간의 총리회담 그리고 정상회담등 대남정책도 김정일이 직접 지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의 대외정책에서 실무책임자들은 김정일의 인물들로서 북미고위급 대표 강석주 또는 남북관계의 총책임자인 김용순, 경제개방을 위한 실무책임자인 김달현 등이 바로 김정일 사람들인 것이다.

셋째 북한의 핵문제는 북한과 미국과의 문제인 동시에 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향하는 민족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북미고위급회담과 연결된 문제로 보아야 하며, 일본과 북한과의 수교회담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인해 이미 남북이 합의된 정상회담이 무산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으며, 다만 북한의 장례식이라는 사정때문에 시간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에 관해 남한당국에서도 북한의 김정일 체제가 출범하게 되면 이미 합의된 사안이므로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평화체제의 실현

이 삼 열(송실대 교수)

1.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과제

1974년 7월 25-27일로 예정되었던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간의 남북정상회담(최고위급회담)은 합의가 발표된 직후부터 전국민의 호응과 관심을 넘어 높은 기대치와 흥분의 도가니에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그토록 정치인들과 언론,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상무대 비리조사가 맥없이 무산되고, 철도기관사들과 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사회불안을 몰아오고, 북핵제재론의 강화로 전쟁위기설까지 퍼지는 등 불안과 불신의 정국이 정상회담의 발표와 추진으로 한꺼번에 정국이 바뀌며 정부의 움직임에 기대를 모으게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남북정상회담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 것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김주석이 7월 8일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기대와 흥분에 부풀었던 정상회담은 한여름 밤의 꿈처럼 허망한 것으로 사라져 버리게 되었고, 김정일 체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김일성의 6.25전쟁 죄과론, 조문 주장론자의 규탄과 조문행위자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론의 대두로, 양측의 비난 성명전으로 정상회담은 물건

너간 것이 아니냐는 실망과 함께, 남북관계가 다시 극도로 악화 될 것같은 예감이 우리를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정세다.

이번 예정되었던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해 보기 위해서 김주석이 사망하지 않고 7월 25일 회담이 실시된다고 한 번 상상해보자. 그렇게 높은 기대와 의미부여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가져올 것이며, 국민들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가 있을까?

역사에서는 우연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가정이나 예측은 불가능하며, 더구나 정상회담같은 것은 회담분위기나 양자의 심리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예측은 아무도 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의제를 정하지도 않고,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개연성의 요소가 너무나도 많다. 문제는 김영삼대통령의 마음 속과 김일성 주석의 의도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 지를 정확히 알지 않고는 성과를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공표는 하지 않지만 양국정상이 가슴에 풀고 있는 아젠다(Agenda)가 무엇이라는 것쯤은 충분히 짐작해 알 수 있다. 북측의 정상이 현상황과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농을 제안도 짐작키 어렵지 않으며, 남측의 정상이 내놓을 문제들도 간간히 발표되는 것들을 보면서 짐작할 수가 있다. 우선 북한의 핵개발 저지와, 합의서의 실천과 이행, 그리고 이산가족의 방문과 인도적 교류, 경제협력 등이 제기될 것이 예상된다.

물론 이번 회담이 분단이후 49년만에 이루어지는 최초의 만남이기 때문에, 회담의 아무런 성과가 없더라도 만남자체에서 상징적인 역

사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역사적 회담이 아무런 합의나 문제의 해결을 내놓지 못하고, 서로의 대립된 입장의 차이나, 대결적 자세만 확인하고 헤어지는 경우에, 만남자체는 의미가 있으나, 역사적으로는 아무런 성과가 없는 오히려 걸림돌과 부담이 되는 무익한 정상회담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것은 보통나라들의 협력관계를 위한 정상회담이 아니다. 적대국가로의, 서로가 서로를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나라 사이의 정상회담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상회담의 과제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일, 원수상을 풀고 화해하는 일, 그리고 전쟁을 막고 평화공존을 이룩하는 일이 되어야 하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없다.

아무리 이산가족의 재회문제나 경제협력문제가 중요하지만, 남북한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화해와 평화공존의 체제를 마련하는 것보다 더 중대하고 시급한 현안은 ^다 ~~아니다~~이다. 남북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을 위한 합의서가 92년 3월에 서명되었지만, 화해와 불가침이 선포되었어도 이것은 남북의 완전한 평화적 관계를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한 문서이다. 적대관계를 풀고 화해하자고 했지만 양측에서 화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토대와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양쪽의 체제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자고 규정한 합의문의 1장 1조를 서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북쪽에서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말할 것 없고, 우리 남쪽에서도 이번 핵사찰논의와 정상회담을 전후한 정부측 발표들이 대북한 관계는 적대관계와 대화 관계의 이중성을 가진 구조라고 표명하고 있다. 김일성 주석을 "주석"이라고

호칭했다고 언론들이 그럴 수 있느냐고 호통을 치고 있다. 6.25의 전범, KAL기 폭파주범, 분단의 책임자로 규탄해야지, 그런 사람과 무슨 정상회담이냐고 야단이다. 심지어 청와대에 빨갱이들이 들어앉아 있어서 그렇다는 비판도 들어본 적이 있다. 조문, 조의표명을 언급했다 날벼락을, 그것도 야당 국회의원이 여당의원들에게 맞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북쪽에서 보기에 어떻게 남쪽이 화해와 상호인정, 협력의 자세를 가졌다고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겠는가?

^{한민} 1장 5조에는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쓰여있다. 그러나 남북양측이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아직 불신과 적대감, 대결의식으로 꽂 차있다. 북쪽이 핵개발 의지나 대남비방선전을 중단치 않음으로써 공고한 평화상태로의 전환에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으나, 우리쪽에서도 공고한 평화상태로의 전환에 우선관심을 갖지 않고 있음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가령 북쪽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평화협정 체결문제는, 설사 그것이 선전용, 전술적 목적의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명분있게 받아들여던가, 연기시키던가, 조건을 달아서 거부하던가 해야 할 것이다. 공고한 평화상태로의 전환에, 6.25전쟁을 종결시키는 평화협정보다 중요한 단계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평화협정을 규범적으로 거부할 명분은 없다. 앞으로 전쟁과 대결을 계속하려고 하면 모르되, 평화의 상태를 이룩하려면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다. 그러나 우리측에서는 남북합의서를 논의

하는 전과정에 이를 거부했으며, 겨우 통과를 위해 5조의 타협안을 만들어 원칙적으로 수긍한 결과가 되었다.

지난 6월 10일 국방부가 발행하는 국방소식 제 39호를 보면 이런 주장이 실려있다. [북한의 평화협정체제 전환주장의 허구성]이라는 제목하에 “군사적 신뢰구축없이 평화체제운운한다는 것은 실질적 평화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아니라 자칫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약화시켜 한미연합 억지력에 결정적 손상만을 초래케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에 북한이 유일한 마지막 핵카드를 이용, 미,북 평화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도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적대관계를 해소하며, 국제적으로 고립을 탈피하고, 체제를 보존하면서, 대내적으로는 대남적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술책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흉계와 술책에 속지 말아야 하며, 성급한 남북평화체제 전환의 환상에 빠져서도 안될 것이다.”

우리 정부의 입장과 태도를 보면, <평화체제의 수립론은 가끔 거론하면서 (예를 들어 노태우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연설에서 평화체제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선언했음) 북한의 평화체제 평화협정 거론은 대남 적화통일의 흉계와 술책으로 치부해버리고 만다> 물론 평화체제의 내용과 실현과정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전략 전술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라대로의 평화체제란 무엇이며, 어떤 과정과 방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나의 개념을 정립해 발표하면서 북쪽과 토론을 벌여야 한다. 이제까지 우리는 대체로 북쪽의 평화체제론 주장에 대해 그건 술책이라고 소극적으로 피하고만 있지, 우리의 대안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대응하

는 무기는 군사적 신뢰구축(Confidence Building Measure)인데, 이것은 [군사적 직통전화시설이나,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및 통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등을 의미하는데, 평화협정을 맺고, 군비를 축소하고, 팀스피리트 같은 대규모 군사훈련 자체를 없애자는 북쪽의 주장에 대해, 현긴장상태와 전쟁준비 군사훈련을 지속시키면서, 부대이동을 서로 알려서 신뢰구축을 하자는 주장은 너무나 명분이 약하고 소극적 자세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김영삼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을 만나든, 김정일을 만나게 되든, 북쪽이 핵개발 문제와 맞물려 내놓을 안이 평화 체제문제일 것은 확실하다. “우리의 핵개발을 중단시키려면 우리가 안심해도 될 평화체제를 만들어 주시요.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군사력 유지로나 매우 어렵고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미국이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금수조치를 풀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안보에 위협이 없어야 핵개발을 완전히 동결시킬 수있겠소.” 이렇게 솔직하게 나올 때 김영삼 대통령은 어떤 대답을 하게 될 것인가?

2. 평화체제 실현의 길

그러면 분단된 한반도의 긴장과 대결의 상황에서 평화체제는 어떻게 수립될 수 있는가?

평화체제란 평화운동가며 사상가인 Johan Galtung이나 Dieter Senghaas 등에 의해 쓰여진 개념이다. 동서냉전체제가 핵무기 개발확대 등으로 서로 위협하는 대결하는 위협체제(Drohsystem)를 극복하

는 바른 길이 평화체제의 수립에 있다고 보았으며, 평화체제는 전쟁의 중단이나 억제같은 소극적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와 원인을 아예 제거하는 적극적 방법에 의해서만 수립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정부에서 내놓았던 정책은 평화정착이었다. 평화정착은 현 휴전상태를 유지하며 군비를 그대로 둔 채 전쟁이 나는 것만 방지하겠다는 소극적 정책이다. 이를 아예 전쟁과 위협의 소지를 제거하는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반도에는 평화가 실현되며 통일의 길이 열릴 수 있다. (필자의 글 참조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군축의 방향, 씨알의 소리, 1988, 6)

한반도의 현상황에서 평화체제를 실현하는 길은 다음의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열릴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1) 우선 현재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현재의 휴전선을 남북한의 잠정적인 국경선으로 인정하고, 무력사용을 포기하며 평화적으로만 통일을 추구하겠다는 합의와 조약이 없이는, 남북의 군비축소나 군사훈련 중지를 도모할 길이 없으며 긴장과 대결국면을 없앨 수가 없다.

2) 평화협정만으로 평화체제가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가 없다. <남북한이 서로 상호 주권과 영토, 체제를 확실하게 인정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통일을 지향한다는 기본관계 조약을 맺어야 한다.> 현재의 남북합의서와 같은 영성향 성격의 문서로서는 진정한 평화와 공동의 안보를 보장할 수가 없다. 아울러서 이를 근거로 남북한

이 동등하게 주변의 4대국(미국, 일본, 중국, 소련)과 함께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안보를 보장하는 어떤 형태의 협약을 맺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 이전에 북한과 일본, 미국의 수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이러한 협정과 조약이 맺어지는 상황에서, 즉 평화의 구조가 국제법상으로 정착되는 차원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작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즉 휴전선 양편의 침예한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기 위해 온갖 공격적 무기와 군사시설 및 주둔군을 감축내지는 후퇴시키고, 남북의 군비를 합의과정을 통해 축소하며, 이단계에서는 주한 미군도 철수시켜야 한다.

이것이 평화체제의 발전된 모습일 것이다. 물론 평화체제는 군사적 조치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공격적이며 배타적인 법률들(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을 수정, 폐기함으로써 진전될 수 있으며, 교류협력의 증대나 신뢰구축을 통해서도 더욱 공고히 발전될 수 있다.

평화체제의 수립에 평화협정의 체결이 필수적 조건임은 분명하며, 남북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으나, 단지 이를 언제 누구와 어떤 형식으로 체결하느냐에 이견과 문제를 갖고 있다.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평화협정체결을 촉구하였으나, 휴전협정 서명 당사자의 명분으로 북한과 미국간에 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대해 남한 당국은 상황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평화협정문제를 거론조차 꺼려하며 가급적 현 휴전협정 상태를 유지한 채 상호교류와 신뢰구축만을 고집하고 있다.

필자는 여기서 남북 양쪽에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평화협정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에 근간이 되는 문서라면 남한을 제외해놓고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1953년 7월 27일 당시의 상황에서 유엔군에 편입된 한국군을 대신해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마크 W. 클라크 대장의 이름과 북한군 최고 사령관 김일성 원수와 중국 인민지원군 총사령관 팽덕회의 이름으로 체결되었지만, 유엔군도 해체되고, 중국군도 철수한 오늘의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만이 평화협정의 당사자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전쟁의 실제 당사국이었던 남북한이 주축이 되고 참전했던 미국과 중국이 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한다.> 휴전협정 60조는 효력발생 3개월후에 쌍방의 군사령관이 관계국 정부에 외국군대의 철수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정치회담을 소집할 것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한국이 참여할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남북 합의서가 조인된 마당에 이제는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회담이 열려야 한다.

평화협정체결이 지연되고, 평화체제의 수립이 요원해지는 데는 남한 정부의 책임도 있다. 이제까지 한국정부의 통일정책이나 남북대화 전략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평화협정 체결이나 휴전협정체제를 보다 공고한 평화의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거나 이를 우선적인 과제로 삼지 않고, 먼 훗날에나 가서 고려해볼 내용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주한 미군의 주둔문제와 관련된 민감한 안보상의 문제때문이 아닐까 짐작된다.

그러나 전후의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동구권이 민주화하고, 지역주

의, 민족주의가 새로운 세계질서의 다극적 축을 이뤄나가는 마당에 한반도의 냉전적 대결구조를 그대로 지속시키거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지연시키려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이나 민족적 요구에도 맞지 않는 태도이다.

원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선관계개선 기본합의, 후 휴전협정대체의 구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4,5 년 사이 남북관계는 유엔 동시가입과 기본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제는 휴전 협정의 대체를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합의서 이후의 정책들을 보면 선 신뢰구축, 후 평화체제 모색이라는 구도를 계속 유지해 관계가 개선된 뒤에도 신뢰가 구축된 뒤에도 고려해볼 사항으로 미루고 있다. 사실상, 평화협정체결은 북한에 80년대부터 줄곧 주장해온 요청이었다. 그때는 우리측이 유엔에 동시가입과 교차승인이 우선적 과제라고 했다. 북한이 우리와 유엔에 동시가입했지만, 교차승인은 우리쪽에만 소련,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졌고, 북한 쪽에는 여전히 미국, 일본과의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남북합의서가 채택되면 이루어질 줄 알았으나, 이번엔 핵사찰 문제를 걸어 핵개발 포기가 투명하게 보증된 뒤라야 북쪽이 요구하는 평화협정, 팀스피리트 군사훈련 중지, 미,일과의 수교가 거론될 수 있다는 자세다. 사실상 지난 5,6 년동안 사회주의권의 해체와 국제적인 고립으로 북한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아주 불리한 곤경에 처하게 되었으며, 남한과의 관계에서도 경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제 미국과의 3단계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이 미국과 수교의 길을 트고, 자유세계

와의 경제적 협력과 교류의 길을 연다는 것은 북쪽으로서도 생명과 같은 문제이다. 이런 사정을 이해한다면 왜 북한이 핵사찰을 담보로 북미수교문제를 트려고 그토록 몸부림을 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제 만약 미, 북한 회담이나 남북정상회담이 실패하여, 북한이 핵개발을 비밀리에 계속할 경우,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나, 한미일 삼국의 제재, 내지는 미국의 단독제재, 군사적 제재도 불사하는 강경노선으로 급격히 전환하게 될 것이 분명하며, 이것은 햇볕이나, 바람이나에서 바람을 택한 경우처럼 점점 더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개발하고 결사적으로 버티며, 비이성적인 도발이나 돌출행위를 오히려 유도하는 결과가 되기 쉽다. 결국 핵확산 조약에서 탈퇴하고 미국이 군사적 보복과 제재조치로 나올 경우, 마지막에 가서는 불가피하게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선택하게 될지도 모른다. 전쟁이 쉽게 북한을 멸망시키고 승공통일로 나가게 되리라는 일부의 낙관적 전망은 너무나 단순하며 위험한 사고이다. 동포가 수십만, 수백만 죽은 뒤에 어떤 방향으로 한반도의 문제가 해결될 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며, 또 그런 통일이 무슨 이익과 행복을 민족에다 가져다 줄런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3. 김정일체제와 남북정상회담의 전망

필자는 우리 국민 모두의 심정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김일성 주석 이었던, 김정일 주석이 되든, 49년만의 남북정상회담이 상징적 의미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에 남을 수 있는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면 어떤 회담이 되어야 역사적으로 남을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정상회담이 다 역사에 남고 의미있는 정상회담은 아니다. 특별히 역사적인 회담은 역사적으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회담이어야 한다. 1960년대 초 동서냉전의 해빙을 가져온 케네디 대통령과 흐루시초프 소련 공산당 제일서기의 회담, 1970년 3월과 5월의 빌리 브란트 서독 수상과 빌리 스토프 동독수상의 동서독 정상회담, 그리고 1993년 가을의 레빈 이스라엘 수상과 아라파트 PLO 의장의 화해의 회담 등이 참으로 역사적으로 남는 정상회담이 되었다.

우리는 특히 분단국의 첫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1970년 동서독 정상회담을 모델로 삼으며,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상징적 의미나 역사적 성격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과연 우리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가 동서독의 그것과 비견할 만큼 역사적인 것이 될 수 있는가? 필자는 그 내용과 성격에서 우선 여러가지 차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그 회담의 내용과 성격이 독일 분단사에서 획기적이고 참신한 것이었다. 아직도 냉전체제와 할슈타인 독트린이 판을 치던 시절에 빌리 브란트 수상은 동독의 국제법적인 인정과 유엔에의 동시 가입, 서방세계와의 관계개선, 경제협력 등을 대가로 주면서, 동서독 간의 인도적 교류와 확고한 평화와 공동안보의 체제, 소련과 동구 여러나라들과의 관계 개선을 대가로 받아내는 과감하고 역사적인 회담을 성공시켰다.

둘째는 이 정상회담의 성과의 조건은 동,서독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개국에 의해 분단되고, 관리되어 온 동서독이 이들의 동의 없이 분단상황의 틀을 전환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사강외교를 동시에 추진해야 했으며, 미국의 동의를 받아냄과 동시에, 소련을 설득시켜 동독에 압력을 넣도록 외곽작전을 병행시켰다. 사실 1970년 3월 19일에 동독의 Erfurt에서 처음 만나고, 5월 21일 서독의 Kassel에서 두번째 만났을 때, 브란트의 동방정책의 오른 팔이었던 에곤 바(Egon Bahr) 장관은 모스크바에서 그로이코 외상과 비밀회담을 하고 있었다. 다각적인 외교작전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성사될 수가 없었다. 특히 브란트의 동방정책의 난제는 동독의 국가주석인 울브리히트(Ulbricht)가 한민족 두국가라는 브란트(Brandt)의 주장을 거부하고 두민족 두국가라는 완전영구분단을 강조했던 것이었다. 서독 안에서도 여론이 갈리어 합의하기 어려웠으나, 이를 국제정치적으로 묘하게 풀어가 강대국의 분위기가 서독이 브란트안을 지지하도록 만들게 하였다.

세째로 1970년의 양독 정상회담은 두번째 5월의 Kassel 회의에서 브란트가 20개 조항을 한꺼번에 내놓고 합의함으로써 이후의 양독 관계의 개선에 기본틀이 되는 포괄적 프로그램이 제시되는 회담이 되었다. 그 후로 맺은 4대강국과의 협약, 72년의 동서독 기본조약, 73년의 양독 유엔동시가입, 그리고 교류 협력 프로그램이 다 이 프로그램에 들어 있었다. 그래서 이 정상회담은 부분적, 단기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포괄적이며 장기적 차원의 역사적 문제해결을 제시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네째로 중요한 사실은 브란트 수상이 동독에 많은 양보를 해주고 폴란드와의 국경선을 동독의 국경으로 인정하면서 구독일제국 당시의 영토를 4분의 1가량 폴란드와 소련에 넘겨주는 동방정책을 구현했을 때, 서독 국민들로부터의 비판과 비난은 말할수 없이 컸다. 특히 폴란드와 소련지방에서 쫓겨온 피난민들의 아우성 소리는 말할 것 없고, 보수정당인 기민당(CPU), 기사당(CSU)의 반대는 당시 매카시 선풍을 보는 것 같았다. 말하자면 이 역사적인 일을 위해 일부 국민들의 정서나 감정을 설득력있게 통제하면서, 반발을 무릅쓰고 성사시켰다는 것이다. 위대한 역사적 정사회담이 항상 당시의 현실에 적응하는 국민적 정서에 영합하지 않고, 이를 역행하면서 역사적 과제가 실천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다. 분명히 현재의 대결상태를 평화적 공존체제로 전환시키는 데는 이런 국민적 반발과 비난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성공한 정상들은 이런 먼 역사로 내다보면서 과감히 결단할 때 어려워도 성공적인 회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제 김정일 체제의 북한과 정상회담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는 물음이 남아 있다. 김일성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핵문제 해결의 시급성이라든가, 김주석의 나이나 여건으로 보아 꽤 서둘러서 추진되었고, 그 절차나 방법에서 우리쪽이 양보하면서 실현시킨 경우였다. 그러나 이제 김정일 체제와는 누가 주석이 되든지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상호주의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김정일 체제가 확고하지 못하고 불안하다고 해서 회담을 연기하거나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누구와 회담을 하든지 남북관계의 현안과 과제는

같기 때문이다. 김정일도 역시 잘 알지 못하는 어려운 상태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한술밥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 남북관계의 현실이기 때문에 누구와라도 빨리 회담을 가져 신뢰를 구축하고 조금이라도 긴장과 대결을 풀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김정일의 성격이 상이나, 불가예측성, 광포한 성격 등이 이야기되고 있으나, 북한의 체제가 아무리 유일체제라 하더라도 수령이나 주석 일개인의 성격이나 기분대로 움직여가지는 않으며, 김일성 생시에도 보았듯이 전문관료와 책임 비서들에 의해 논리적으로, 일관성있게 움직여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개인의 성격을 중심으로 예측하고 상상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특히 김정일의 참모들은 훨씬 젊은 세대이며, 전후에 동구와 소련에 유학한 합리적인 세대이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기술관료들이 있는 한, 함부로 제멋대로 정상회담을 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끝으로 한가지 제언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추진될 정상회담에서는 실패하지 않도록 양쪽의 참모진들과 실무진들이 미리 만나서 중요한 것을 미리 합의하고 양정상이 불필요하게 논쟁하거나 긴장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정상회담 준비 팀을 현내각의 제한된 관료로만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을 함께 참여시켜 준비토론을 하는 과정이 중요하리라고 본다. 그리고 대표단의 선정도 100명 중에 공식, 비공식 수행원과 경호원 50명 만으로 하는 것은 역사적 회담의 모양치고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필자는 여기에 야당과 재야, 종교, 학계, 통일운동계 등 정부와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라도 한 10여명 대동하고 가서 정말 전 민족적 과제의 해결에 도움을 받는다는 식으로 전시되었으면 좋겠다. 경호원이야 40명만 간다고 안된다고 할 수도없고, 100명이 가도 모자란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대화를 하러 간다면, 상대방이 신변 안전을 책임져 준다고 믿어야지 서안사건같은 것이 일어날 염려부터 한다면, 아예 만날 필요도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정상회담의 지향: 합의서 이행과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강 정 구(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1. 머리말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민족은 통일시대를 맞았다. 이 통일시대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4대 민족사적 전환기의 하나로서 이 시기에 결정된 민족사적 역사행로가 그 이후의 긴 민족사의 기본행로를 규정짓는다는 의미에서 '민족사의 결정적 시기'(critical historical period)이다. 곧, '어떠한 종류의 통일이냐',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등의 통일상, 통일과정, 통일방안, 통일주체 등에 따라 앞으로 반세기 또는 몇 세기동안 민족의 역사도정이 거의 결정되게 된다.

이렇게 우리 민족사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통일이 단순히 남북이 재결합되는 물리적 결합으로 끝나 국가통합에는 이르지만 사회적 분열과 남·북의 지리적 분열로 치닫는 통일독일식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될 것이다. 통일은 해방공간의 민족사적 과제였던 분단극복을 통한 민족재통일을 성취해 민족공동체를 복원하는 통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곧, 민족의 동질성을 중심으로한 공동체적 성격이 복원·발전·강화되는 통일한국의 미래상은 통일의 결과로 민족내

부에서 어느 한 쪽의 지배와 다른 한쪽의 종속이 생성·발전되어 내부식민지화(internal colony)의 형태로 나타나서는 안된다.

이렇게 내부 종속과 식민지화를 배제하고 공동체적 발전을 성장·담보할 수 있는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북협상 또는 정상회담이 지향해야할 방향기조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민족공동체의 성격, 남북합의서의 민족사적 의의, 정상회담이 지향할 기본방향, 합의서의 전반적 이행을 위한 접근방식 및 지향, 합의서 가운데 교류·협력을 위한 부문의 지향과 유의점에 관하여 논의하겠다.

2. 민족공동체상

민족공동체에서 공동체는 촌락공동체의 원형에서 출발한다. 촌락공동체의 3대 구성요소는 동질적 가치관의 공유, 직접적이고 대면적인 인간관계, 기능적 상호의존의 기초위에 형성되는 호혜관계이다. 그러나 오늘날 산업사회의 공동체 개념은 이러한 전산업사회(pre-industrial society)의 공동체적 구성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는 힘들다. 단지 동질적 가치관의 공유, 자발적 협동에 의한 기능적 상호의존관계의 형성이라는 두가지 요소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집단을 공동체라고 개념정의하는 것이 오늘날 산업사회에 걸맞는 개념이다. 또한 공동체는 공동체성(communitiness) 또는 공동체 성격이 증진되는 과정으로 곧, '연속변량적' 개념으로 이해되

어차지 어떤 하나의 완성된 모형으로 상정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개념정의로부터 남북이 민족생존권·민족자주권·민족역량강화·전민족이익증진·민족일체감·공존공영 등의 민족중심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기능적 상호의존관계를 확충하면 우리는 민족공동체 형성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됨을 의미하는 민족공동체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있다. 그것은 공동체 구성부분의 기능적 상호의존관계가 남과 북이라는 지역적 변수에 의해서 지배와 종속, 중심부와 주변부의 역관계에 기반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류의 내부식민지(internal colony) 관계는 기능적 상호의존관계가 아니라 남과 북이라는 우연변수에 의해 지배와 피지배의 민족내적 갈등관계로 다시 비화되는 비극을 의미한다. 이 관계는 또한 공동체의 구성요소인 동질적 가치관의 공유라는 구성요소를 위배한다.1)

3. '합의서'의 의의

1991년 12월 13일 분단 반세기만에 남과 북은 민족사의 대장전이고 7천만 겨레의 공동강령인 기본합의서를 이끌어 내었다. 이 기본합의서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첫째, 통일시대의 민족사적 과제인 통일추진의 기본틀을 제공했다.

1) 단기적 흡수통일에 의한 이러한 내적 식민지성의 사회분열적 현상이라는 독일통일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한반도에서의 흡수통일이 갖고 올 필연적인 극단적 사회분열을 경고하는 글은, 홀거 하이데, "민족적 통일과 사회적 분열: 독일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창작과 비평』, 1993년 봄

합의서는 7.4공동성명의 통일3원칙인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재확인하고, 이 통일3원칙에 의거하여 통일의 길을 열고,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여' 화해와 협력의 길을 닦아나가 통일기반을 조성하자는 합의를 이룩하고, 이 결의를 7천만 겨레 앞에 엄숙히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다.2)

둘째, 이 합의는 남북사이의 자주적이고 공개적인 합의였다. 분단 반세기 만에 남쪽의 통일운동의 활성화, 탈냉전이라는 세계사적 전환 등과 맞물린 시대의 요구를 남북이 자주적으로 공개적인 협의, 한반도문제의 당사적 해결원칙, 화해의 원칙 등을 견지하면서 이룩한 통일을 위한 민족대장전이다.

7.4공동성명은 일부 최고위층의 비밀접촉과 비공개에 의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공개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었다. 94년 7월 25일로 예정되었던 김일성주석과 김영삼대통령사이의 정상회담 또한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이룩한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치닫는 6월 핵위기를 해소하려는 지미 카터 전미국대통령의 중재의 결과물이란 아쉬움을 남긴 것이다. 그러나 합의서는 1990년 9월 4일부터 '남북

2) 통일3원칙에 대한 해석은 처음부터 남북간에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비록 북한의 요청으로 통일3원칙을 재확인할 수 밖에 없었지만 남한의 해석은 처음부터 자의적이다. 특히 민족대단결의 해석은 왜곡에 가까운 것이다. 통일원발행의 『남북기본합의서 해설』 38쪽은 "자주는 남북쌍방이 당사자로서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고, 평화는 기본합의서 제5조에서 남북간 평화상태로의 전환을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통일은 평화적 방법에 의해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민족대단결은 통일이 민주주의와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기초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시하는 문제'를 의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이 양측의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제5차회담에서 합의서를 채택·서명하고 1992년 2월 19일 6차고위급회담에서 발효시켰다. 1년 6개월간의 긴 협상과정을 통해 남과 북이 자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성취한 결과물이다.

세제, 남북의 서로 다른 통일접근법의 동시 수용이다. 곧, 북한의 정치·군사문제 우선해결을 주장하는 연방주의적 접근법과 남한의 교류우선의 기능주의적 접근법을 동시에 수용하는 접합을 이루었다.

북한은 정치·군사부문을 중시하여 이 부분의 해결이 선행된다면 기타 영역에서의 타결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연방주의적 접근을, 남한은 시민사회내의 교류와 협력의 증가는 신뢰구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여러 부문의 기능적 상호의존성을 높여 공동체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능주의적 접근을, 각기 선호하고 있었다.³⁾ 그러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명칭에서도 보듯이 합의서는 남북이 각기 기능주의 대 연방주의적 기초를 깔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의 접근법을 수용하는 보다 진척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아래의 표가 보여주듯이 고위급회담에서 남측은 주로 관계개선,

3) 김종립은 연방주의적 접근을 국가주의적 해결(state solution), 기능주의적 접근을 시장적 해결(market solution)로 보고 있고, 이 두 해결방안보다는 공동체적 해결방안(community solution)을 제안하고 있다. 김종립, "민족공동체의 이론구조", 국토통일원(역음), 『한민족공동체 형성의 모색』 (서울: 1990)

신뢰구축, 교류·협력, 실천가능한 일부부터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점진주의를 지향하였다. 대조적으로 북한은 불가침, 정치·군사 대결상태 해소, 비핵지대화 등을 우선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일괄합의', '동시집행원칙' 등을 수정제의하고 남측 또한 이를 받아들여 연방주의와 기능주의의 접목을 이뤘다.

표1.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서 명칭에 대한 합의 과정

고위급회담 차수	남측제안 제목	북측제의 제목
1차고위급회담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합의서,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 방안,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방안, 남북간의 군비감축 추진방향	회담 전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3개원칙, 정치적 대결상태 해소방안,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 방안,
2차회담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	북남불가침에 관한 선언
3차회담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기본 합의서, 남북불가침에 관한 방안	북남불가침과 화해협력에 관한 선언
4차회담	화해·불가침과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불가침과 화해 및 협력교류에 관한 선언,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
5차회담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네째, <남북현안문제 해결의 원칙적 기초에 대한 포괄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본합의서는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방향을, 각 부속합의서는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화해'에 관한 부속합의서는 체제(제도)인정과 존중, 내부분제 불간섭, 비방·중상 중지, 파괴·전복행위 금지,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불가침에 관한 부속합의서는 무력불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는 경제교류 협력, 사회문화 교류 협력,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다루고 있다.

물론 이러한 포괄적 합의는 완결적인 것은 아니다. 화해에 관한 부속합의서 부기 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국제기구나 국제행사에 각기 하나의 명칭, 하나의 의석으로 참가하는 문제, "다른 나라들과 맺은 조약과 협정들 가운데서 민족의 단합과 이익에 배치되는 것을 개정 또는 폐기하는" 문제, 불가침에 관한 부속합의서 3조에 서술한 무력 증강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 문제, 영공·영해 봉쇄 문제, 서울·평양지역의 안전보장 문제(남측 제안),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 부기 항에 명시된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 철폐문제(남측 제안) 등이 추가로 합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특기할 사항은 이들 부기사항의 대부분은 북한이 제기하였던 문제로 일괄합의와 동시집행원칙을 주장한 북한이 대폭 양보한채 부속합의서가 체결되었다. 더 나아가 북한이 우선시하고 기본합의서 2

장 12조에 명시된 '단계적 군축실현'은 부속합의서에서 전혀 합의를 보지 못하여 구체적 언급도 되지 못하는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안고 있긴 하지만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는 위의 미합의문제를 합의하고 해결하는 터전이 될 것이다.

4. 정상회담의 기본노선

지난 6월위기는 한반도가 전쟁일보직전까지 치달고, 국내에서는 전쟁불사론과 전쟁사주론이 기승을 불이는 광적인 상태에 까지 진입하였다. 탈냉전시대에 한반도는 냉전의 극치를 그리는 반시대적, 반민족적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전쟁위기는 카터 전대통령의 방북을 고비로 가라 앉으면서 7.25정상회담으로까지 전진되었다. 비록 김일성주석의 서거로 7.25정상회담은 무산되었지만 곧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시구도적인 민족사의 맥락에서 정상회담이 지향할 방향에 관해 간단히 논하겠다.

정상회담의 의제나 논의는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당면한 민족사적 절대과제인 전쟁방지와 핵심과제인 남북화해와 협력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에 모아져야 한다. 정상회담을 통해 한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관계개선을 꾀하는 류의 성격이 아니라 갈라진 민족이 전체 민족생존권이나 통일을 위해 긴급하고 큰일에 무게의 중심을 두는 목적의식적인 것이어야 한다. 흔히들 실현가능한 작은 일부터 시행하는 주장은 각기 다른 나라사이에 해당되는 것이다. 작은 일은 큰 일이 해결되면 보다 쉽게 풀리기 마련이니까 작은 일에 매달려 큰

일을 그르치게 되면 큰일도 작은 일도 망치게 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큰일을 중심으로 작은 일을 보조축으로 남북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따라서 청와대가 우선적으로 논의할 의제로 상정하려는 흠어진 가족만남, 남북한 인적교류 및 경제교류 확대 등은 우선적이 아니라 보조축으로 다뤄져야 한다. 그러므로 남북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문제를 다룰때도 합의서의 제3장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보다는 제1장인 화해와 제2장인 불가침 사항이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또한 당면 현안가운데 가장 핵심적이라고 하는 북한 핵문제도 개별적 의제로 논의될 것이 아니라 위의 절대과제인 전쟁방지와 핵심과제인 통일기반 조성이란 기본적 틀 내에서 또 기본적 틀과 접합되는 방식으로 논의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북한 핵과거의 투명성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과거 핵 투명성과 경제협력을 교환하는 제의가 있으나 북한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이전에는 북한이 이를 수용할 수 없고 또 요구해서도 안된다. 이러한 요구는 정상회담의 진전을 결정적으로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북·미·중은
한국의 태야

5. 합의서 이행을 위한 방향기조

민족의 염원을 수렴하고 통일대장전의 성격을 지닌 합의서는 비록 발효는 되었지만 이의 이행단계에서 북한핵문제를 미국이 제기함으로써 전혀 진척되지 못한 채 거의 사문 화되어 버렸다. 특히 93

년 3월 12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다는 선언이 있는 뒤 남북은 합의서 정신을 지속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대관계가 심화되는 파국을 맞았고 이 때문에 지난 6월까지 무려 여섯차례나 전쟁위기를 맞는 주기적 악순환만 거듭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앞으로 열리게 될 남북정상회담이 그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남북이 각기 합의서 정신으로 돌아가 합의서를 충실히 이행하는 구도를 일구어야 한다고 원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다음에서 합의서이행을 위한 기본노선이랄까 방향기조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1) 북한정권 몰락에 의한 단기적 흡수통일의 사전 예방

단기적 흡수통일은 엄청난 통일비용과 통일충격의 단기적 도래로 인하여 상호 자발적 협동에 의한 기능적 상호관계가 성립되지 못하고 지배와 종속의 내부식민지화로 귀결된다. 이러한 통일은 민족공동체나 사회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완전 배제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한다는 ‘남북합의서’ 정신에 배치되고 공존·공영과 민족복리를 통일기조로 내세웠던 김영삼정권의 통일기조와도 상충된다.

이영선의 통일비용 추계는 북한의 점진적 경제개혁과 장기적인 경제통합을 전제로 남북이 소득균등화되는 기간이 남한의 원조가 시작된 이후 약42년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남한이 부담하게 될 통일비용은 1990년 남한 국민총생산액(GNP)인 2,380억불의 2.8배

정도인 8,414억불로 보고 있다. 1990년 현재 1인당 GNP가 5천여불에 불과한 남한이 4배인 약 19,500불의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보며 더구나 단기적 흡수통일일 경우 그 비용은 더욱 커진다고 결론을 내린다.⁴⁾

한국개발연구원은 경제통합후 북한을 남한의 60%경제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10년간 매년 200억달러가 소요된다고 보며,⁵⁾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은 북한정권 붕괴시 10년간 재건비용으로 남한이 연간 500-600억달러를 지원해야 하며,⁶⁾ 하바드대학 인구개발연구소는 남한과 서독의 1인당 GNP와 북한의 경제상황을 상호비교한 결과 10년간 2500-5000억달러의 통합비용이 든다고 보고 있다.⁷⁾

다른 한편 노정선교수는 통일이의 측면에서 남북이 상호경제공동체로 '뫼으로 중공시장 견제, 일본 견제, 미국 견제, 군사비의 산업투자비 전환 등으로 역동적 정의 효과(positive effects)를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이 경우는 단기적 흡수통일이 아니라 남북연합, 연방제 등을 전제한 추계이다.⁸⁾

위의 통일비용의 경우는 통일로 얻을 수 있는 분단비용의 감소, 경제통합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에 대한 이점 등에 대한 면밀한 연

4) 이영선, “한반도에서의 경제적 통합의 효과: 통일비용과 이득에 대한 시나리오적 접근”,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북한연구센터 개최, ‘남·북한 통합을 위한 선결과제’의 학술발표회 발제문, 56, 61쪽

5) 『국민일보』 1991년 11월 2일, 이영선 위의 논문 61쪽에서 재인용

6) 『한국경제신문』 1992, 4.22, 이영선 위의 논문 61쪽에서 재인용

7) 『국민일보』 1992, 1.6, 이영선 위의 논문 61쪽에서 재인용

8) 노정선, “민족통일과 국민적 합의”, 평화문제연구소주최, 학술토론회 ‘문민시대의 통일정책 방향’ 토론문 1993년 6월 11일

구가 진행되지 않은 결점이 있다. 그러나 단기적 흡수통일의 경우 사회적 갈등의 재연으로 이러한 통일이익이 기대되기 힘든 점을 고려한다면 통일비용의 기하급수적 규모는 필연적이다. 따라서 북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을 예방하는 정책이야말로 보다 공동체 지향적이고, 민족전체의 장기적 이익과 번영을 담보하는 가장 절박한 정책가운데 하나이다.⁹⁾

많은 인사들이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에 대해서도 남쪽이 준비를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지난 일년여동안 주기적인 악순환을 겪은 한반도 핵위기 때마다 통일전쟁, 압살정책, 전쟁불사론, 북한별목공정책 등을 왜치며 직·간접적인 북한붕괴론을 외쳤다. 그러나 이는 진정 남과 북이 다같이 하나되는 민족공동체적 통일 지향과 합의서 정신과 배치된다. 오히려 이러한 갑작스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장기적 민족의 공존공영을 보장하여 남북간의 가장 큰 효용교차영역에서 공통의 이익을 최적으로 산출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는 북한의 핵문제를 한미일공조체제라는 비민족자주적인 대응이나 제재정책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일괄타결을 지원하여 북미, 북일수교로 북한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더불어서 흡수통일 배제를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실질적인 관계개선, 군축 등으로 가시화시켜야 한다.

비록 남한정부가 흡수통일을 배제한다고 밖으로 표명하고 있지

9) 이와 유사한 주장으로는 고일동, "내륙경제관계 발전의 기본요소와 남북한 경협 추진방향", 통일원, 『통일문제연구』 5권 1호, 1993 봄

만 실제의 정부행위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김일성주석 서거이후 남한 정부의 행위는 흡수통일 지향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김주석 서거소식이 전해지자 말자 전군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북한군이 조의행사 등에 여념이 없는데도 어떤 사태에도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선무방송을 계속 허용하고, 정상회담의 유보를 발표하고, 통일대비 재산특례법을 발표하고, 냉전과 반복의 피를 먹고 자라온 집단들이 벌이는 조문파동 매카시즘에 방관내지 부추기는 듯한 모습 등은 김정일로의 정권이양과정에서 북한정권의 붕괴를 희망하는 저의를 역력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저의는 남북합의서의 준수와 이행과는 거리가 멀다. 흡수통일이라는 반민족공동체적 지향의 포기를 단순히 선언적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 행위차원에서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합의서 이행의 핵심이다.

2) 남한의 대미자주노선의 강화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민족대장전에 합의하여 구체적으로 합의서 이행단계로 접어들려는 시점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92년 1월 방한하여 핵문제를 제기하고 핵과 합의서 이행 및 경협 연계 요청이 있는 후 합의서에 대한 실질적인 진척이 단절되었다. 이는 남한 정부가 미국의 내정간섭에 극도로 취약함을 노정시킨 본보기이다. 이제 통일시대를 맞이한 오늘의 시점에서 합의서의 '당사자 원칙'과 같이 핵문제 등을 민족내부문제화하여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대미 자주노선이 강화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합의서가 담고 있는 내용만 하더라도 자주노선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대표적 예는 제1장 5조가 남북화해를 위한 평화상태로의 전환과 제2장 12조가 불가침 조항에서 군축실현과 군사적 신뢰조성이 추진되기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한미연합사 위주의 군사체제에 남한이 자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전혀 진척될 수 없다.

3) 합의서의 산술평균적 남북접근법의 결합에서 '主 연방주의 補 기능주의'적 접근법으로의 전환

남한의 통일 및 대북관계 접근법인 기능주의는 상호교류를 통해 기증적 의존성을 증가시켜 신뢰를 구축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것은 양 측의 역관계가 동등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현재 남북 힘관계가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순수기능주의적 상호교류는 강자에 의한 약자의 흡수당함을 야기시킨다. 이는 민족공동체적 통일과 배치된다. 민족공동체적 통일을 위해서는 이러한 역류효과가 나지 않도록 정치·군사문제 해결에 비중을 더 두는 접근법의 결합방식이 되어야 한다.

기능주의는 상호거래와 정보교류를 통해 기능적 상호의존 관계를 높여 부분적 통합(sectoral integration)이나 공동체의 형성으로 나아가고, 이 한 부분의 통합이 다른 부문으로 전파되어 확산효과(spill-over)를 가져와 전체 통합이나 공동체 형성으로 발전된다는 논

리이다. 이러한 논리는 연방주의의 단점인 연방국가에 이르는 과정의 제시라는 점에서 연방주의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고 이 점에서 서로 접합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능주의는 파급효과가 현재 강한 부분에서 약한 부분으로 일방적으로 흘러가 일방적인 강요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일부분에서의 상호의존 관계는 다른 부분으로 확산되기보다 역류효과를(spill-back) 가져올 수 있다. 흡수통일에 의해 기능주의적 교류·협력이 아무런 제약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통일의 경우 동서독 민족공동체라기 보다 '국가 통일과 사회적 분열'이라는 반공동체성(anti-community-ness)이 압도적이라는 현존의 역사적 경험이 기능주의적 접근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연방주의는 기능주의가 초래하기 쉬운 이러한 역기능적인 역류효과를 목적의식적인 정치적 결단에 의해 저지시켜 통합이나 공동체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상호보완적이다. 또한 이 연방주의는 기능주의의 한계인 기능적 상호의존성과 그 변화에 국한되는 점을 넘어 구조적 변화까지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 형성에 가속제 역할이 기능주의보다 우세한 측면이 있다.

위의 논의에서 우리는 남북공동체 형성과 발전에는 기능주의와 연방주의적 접근이 서로 접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 수준에서의 논의이다. 이러한 이론적 수준의 결론을(양 접근법의 접합) 구체적으로 남북민족공동체 형성에 적용시킬 때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힌다. 필자는 바로 이 접합 부분에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

전환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두 접근 방식의 접합에 대한 전략 구상은 단순한 산술평균적 결합이 아니라 현재 남북의 역학관계를 주어진 조건으로(given conditions) 두고 이 바탕 위에 공동체 구성 요소인 동질적 가치관의 공유와 자발적 협조에 의한 기능적 상호의존성을 담보하는 전략이어야 한다. 곧, 남과 북의 역학 관계가 불균등할 경우 기능주의적 접근은 강자의 논리가 일방적으로 지배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현재 남북의 역학 관계가 심한 불균형을(GNP수준에서의 10배, 인구수준에서의 2배, 연군사비 수준에서의 1970년대 중반 이후 3-4배, 남한의 외교망 확장과 북한의 외교적 고립화 등) 이루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연방주의적 접근법을 기본 축으로 기능주의적 접근법을 보조 축으로 접합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지 않을 경우 공동체 형성이라는 발전적 통일이나 공동선(public good)의 성취가 아니라 사회 분열적, 반공동체적 통일로, 곧 독일과 같은 단기적 흡수통일로 귀결될 위험성이 있다. 아울러 북한은 국가사회주의의 전형을 취하고 있어 시민사회가 제대로 발전되지 못하였기에 시민사회 수준의 자발적 교류·협력이 연방주의적 접근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¹⁰⁾

10) 보다 연방주의적 해결방안에 기초하여 기능주의와 연방주의의 접합을 협의주의(consociationalism)적 대안으로 풀어나가려는 제안으로는 임혁백,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분석" 이용필 외, 『남북한 통합론』 (서울: 인간사랑, 1992)

4) 상호주의를 고집하지 말고 고르바초프의 '일방적 군축선언'과 같은 핵심 사안에 대한 일방적 양보주의를 남한이 상호주의적 전제 없이 시도한다.

고르바초프는 약한 소련이 강한 미국에 일방적으로 파격적인 양보주의를 추진하여 탈냉전의 분수령을 형성하였다.¹¹⁾ 그러나 남한은 강자의 입지에서 허약한 북한에 일방적 양보를 하더라도 남한 내의 파급효과는 그리 크지 않고 북한에 주는 영향력은 커질 것이다.¹²⁾ 또한 소련과 미국 사이는 이민족 적대관계였으나 우리는 동일민족 사이이다. 민족대단결의 견지에서 이러한 일방적 양보는 수용되기 쉽고 그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5) 상대방 우선주의를 택하라.

북한은 남한이 가장 긴급하고 핵심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이산가족 문제 등에 시범적으로 남한의 요구를 수용하고, 남한 또한 북한

11)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1988년 12월 7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일방적인 군축을 선언했다. 그는 1991년까지 일방적으로 소련의 유럽 지역과 동맹국들로부터 50만 명을 감축하고 10,000대의 탱크 8,500대의 각종 야포 및 800대의 전투기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The Korea Herald, December 9, 1988*, 김창수, "냉전체도의 해소와 군축을 위한 분석과 대안", 학술단체협의회 제5회 연합심포지엄, 『한국 사회의 민주적 변혁과 정책적 대안』 (서울: 역사비평, 1992)에서 다시 옮김

12) 남북한의 군사력 감축에 대한 고르바초프식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 글로는, 김창수, "냉전체도의 해소와 군축을 위한 분석과 대안", 학술단체협의회 제5회 연합심포지엄, 『한국 사회의 민주적 변혁과 정책적 대안』 (서울: 역사비평, 1992)

이 제기하는 핵심 당면 과제인 군비축소, 대미수교 등의 북한 요구를 시범적으로 수용하여 물꼬를 터야 한다.

6) '작은 것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방식에서 '긴요한 것 부터 큰 매듭을 푸는' 방식으로.

남한이 주장하는 '실천 가능한 작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점진주의가 아니라, 전쟁 방지와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데 가장 긴요한 것부터 우선 매듭을 풀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긴요주의 접근방식'을 택해야 한다. 점진주의 접근은 최근 조문메카시즘의 광란이 보여주듯이 전쟁 방어나 통일 기반 조성의 터전을 무너뜨리려는 극우분열주의자나 반공반북의 피로 성장한 무리들의 책동에 언제나 휘말릴 우려가 있다. 특히 정치적 지도력이 약한 정권일 수록 이러한 돌출적인 반민족·반역사적 행보에 속수무책이 되어 기존의 성과를 원점화시킬 우려가 다분히 있다.

7) 남북 최고위당국자의 정치적 지도력이 확고해야 한다.

정상회담은 실무·행정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지도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결단에 의해 교착 상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남북지도자가 확고한 정치지도력을 갖춰야 하나 김정일체제에서는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남한 또한 개혁의 상실과 상무대 사건 등으

로 지도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정치적 결단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의 경우 김주석 조문문제에 대한 민자당이나 일부 극우 진영의 메카시즘 등은 김영삼정권의 정치적 지도력 부족과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기본 구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반통일적 행위이다.

특히 정상회담은 총리회담 등과 같은 실무회담에서 풀기 어려운 정치적 현안을 일괄타결하는 것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 때 정권기반이 취약하고 지도력이 약할 경우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8) 분단연합세력(극우반공단체 등)에 대한 통일연합세력의 역량강화

시민사회의 통일운동이 활성화되어 정부나 정치세력이 통일지향적일 수 있도록 강제하고 견인하는 역할이 이뤄져야 한다.

5. 교류·협력이 지향해야 할 방향

이미 앞에서 언급했지만 합의서 이행의 원칙적 기초는 민족사적 절대 과제와 핵심 과제인 전쟁방지와 통일기반 조성에 직결된 부분인 기본합의서 제1장과 2장, 곧 화해와 불가침 영역에 우선권을 두어 큰 매듭을 먼저 풀기 시작하면서 교류·협력 부문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필연적인 것은 ^{남한측} 교류·협력문제 때문에 ^{남한측} 화해와 불가침 영역이 저해받는 구도가 형성되어서는 안된다. 설

사 교류·협력부문이 저해를 받더라도 화해와 불가침 영역이 먼저 해결되는 방식이 민족공동체 형성에 기능적이다.

1) 전민족적 사업의 우선적 추진

민족 전체의 이익과 결합된 영역이기 때문에 효용교차부문(joint interest points)이 큰 부문이고, 민족동질성·민족일체감의 증진에 기여해 민족공동체 형성에 밑거름이 될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 또는 남북 어느 한쪽의 이익에 국한되기 보다 전체 이익 지향적이므로 남북 양측에 사업에 대한 명분이나 동원력을 높일 수 있다. 보기를 든다면 자원공동개발 문제, 정신대문제, 일본 군사력 및 군국주의화에 대한 공동대응, 교과서 왜곡, 동해바다 소련 핵폐기물문제, 중국의 황사문제, 황해 오염문제 등일 것이다.

합의서 3장 15조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로 경제부문에서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는 경제협력과 교류를 우선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경제영역 뿐 아니라 다른 영역인 교육, 문학, 예술, 통신, 일반 문화 등에서도 이와 같은 전민족적 사업에 우선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들 공동사업을 통해 상호간의 정보, 자료, 지식, 기술, 접근방법 등의 협력 및 교류는 전체 민족의 이익을 도모하고, 이 과정을 통해 상호 기능적 의존 관계가 성립되며 민족동질성이나 일체감을 더욱

증진시킬 것이다. 이들 사업에서 우리가 유의할 점은 이 공동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남북 각자의 기계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남북의 상호 교호작용의 결과물이 (interaction effects or inter-dynamics) 미치는 파급효과가 민족동질성 회복이나 민족일체감 형성에 가져올 emerging property가 기하급수적 경향을 띤다는 점이다.

또한 교류·협력분야에도 상대방 우선주의를 적용하여 상대방이 긴요하게 필요하는 부문에 우선을 둘 필요가 있다. 보기를 든다면 나진·선봉지역의 개발에 대한 투자 등은 북한이 긴요하게 요구하는 부문이므로 이에 대한 중점투자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2) 남북간의 교류·왕래·협력은 민족화해과 공영을 지향하는 전체 하에 진행되어야 하고, 교류보다는 협력 및 공동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교류는 크게 세영역의 교류, 곧 사람(통행), 물자(통상), 정보(통신)교류를 일컫는 것으로 남한의 기능주의적 접근법의 핵심부분이다. 교류나 왕래가 순수한 경제논리 또는 왕래 자체를 위한 왕래라는 논리로 추진될 때 확산효과에 의한 공동체적 통합보다는 강자에 의한 약자의 흡수라는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때 약자의 경계와 방어본능에 의해 상호교류와 협력부문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 공동체적 통일은 제동이 걸리기 쉽다.

그러므로 순수한 경제논리보다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부문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협력논리가 교류와 왕래부문의 지배논리가 되

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논리하에서만 남과 북이 진정 화해·협력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이 성숙단계에 도달하여 서로간의 적대감이 거의 해소된 단계에서는 가능하면 인적·물적 교류 등에서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민족공영과 단합에 기여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교류를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무분별한 방송·출판의 교류와 개방은 퇴폐문화나 자유주의 사상을 일시에 불어넣을 위험성이 있어 점진적인 상호 접촉을 헤치기 쉽다. 협력은 서로가 필요한 부분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민족화해와 동질성 증진에 교류보다는 앞선다고 볼 수 있다.

이들 협력 부분은 순수 전통문화의 복원, 민족문화 유적 답사 및 발굴, 통일음악회, 통일축구, 통일예술단 등이다.

남북간 협력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3) 적대감·이질감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폐가 이뤄져야 한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남한은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간의 신뢰를 쌓은 다음 통일로 나아가는 기초를 띠고 있다. 반면 북한은 군축이나 정치적 문제 해결 그 자체가 가장 큰 신뢰라는 입장을 취한다. 교류와 협력이 적대감 해소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만약 목적 의식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에 의해 이를 뒷받침하지 않을 경우, 달리 말하면 화해에 관한 부속합의서 4조가 명시한 “기본 합의서에 저촉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개정 또는 폐기문제를” 협의·해결하는 부문에 전진이 없을 경우, 교류와 협력은 수시로 발

생하기 쉬운 남북사이의 정치적 긴장관계때문에 적대감 해소를 일관되게 보장하지 못하고 각기 정치적 의도에 따라 수시로 확산되었다 감소되었다 하는 악순환을 겪기 마련이다.

법과 제도의 개선에 가장 절실한 부분은 남쪽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철폐, 안기부법과 헌법의 영토조항 개정이고 북쪽에서는 노동당 규약의 개정 등이다. 김일성 서거후 전개되는 조문, 메카시즘은 국가보안법 등이 다분히 부채질하고 정당화하는 구실로 작용한다.

4) 교류·협력 이행시 유의사항

① 월남인들의 고향방문이나 흩어진 가족의 만남 등에서 이북5도 민회 등 제도권 내의 동향단체 중심으로 인원선정 및 사업전개는 민족동질성 보다는 적개심을 고조시켜 남북간의 화해를 저해할 요소가 많으므로 다른 조직을 통하여 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② 언론의 상대적 자율성이 보장되는 남한의 언론이 통일언론으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북한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통합이라는 사회조직 원리때문에 북한 언론은 구조적 제약하에 놓여 있다. 그러나 현재 남한의 제도권 언론 역시 개혁 치외법권하에 놓여 있었고 수구세력의 은상지 역할을 하므로 통일언론으로 거듭나기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우선 제도권 언론에 대한 개혁이 선행되어야만 남북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김주석 서거후 전개된 조문메카시즘은 마의 사냥까지 서슴치 않는 극우 언론들과 냉전·반

공·반복으로 성장한 역사의 찌꺼기들이 합작한 결과물이다.

6. 맺음말

7.25남북정상회담이 김주석의 갑작스런 서거로 무산된 점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갈구하는 수많은 민족구성원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북의 후계가 누가 되든 간에, 북의 새로운 정상을 좋아하던 싫어하던 간에 남과 북의 정상이 함께 만나 민족이 직면한 생존권의 위협에서부터 통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논의와 타협과 자주적 해결을 이룩해야 하는 것은 통일시대의 민족사적 책무이다.

* <이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의제는 민족사의 절대과제인 전쟁방지와 통일기반 조성이다.> 이들 과제와 더불어 화해와 교류·협력 등 여러 현안들이 포괄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이 때 우리는 이미 남과 북이 합의한 남북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는 정상의 논의와 합의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 지에 대한 기본 구도를 제공해 준다. 그것은 화해와 불가침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교류와 협력으로 민족공동체성을 회복하여 7.4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통일3원칙하에 통일터전을 굳건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서 정신 아래 민족사적 절대과제인 전쟁방지와 핵심과제인 통일기반 조성을 중심축으로 화해와 교류·협력을 보조축으로 하여 동시 병행하는 방식으로 합의서 이행을 닦아 나가야 할 것이다.

• 토론 > 박정수(국회의원, 민자당)

- > 조순승(국회의원, 민주당)
- > 이창복(민족회의 공동의장)
- > 장기천(전교회협통일위원장) 등
- > 김윤옥(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원장)

박정수: 남북정상회담이 무산된 건 아쉬움 (민자당).
6.25전쟁 같은 전쟁을 전쟁정신으로 보았을 (남북이만 평화합) 5.4.11.
민족사적 책무... 남북... 7.4.11. 7.4.11. 7.4.11. 7.4.11.
비핵화... 남북...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남은 남이라 평화라고 할 수 없고 이념.

각각의... 남북...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김윤옥: • 민자당.

남북...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7.4.11.

이런 불행이
왜냐하면

가시 = 가시성 - 가시성이기, 가시성이라는 것은 무슨 생각인가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이탈 -

강정구 - 가시성이 아니라 가시성이 아니라 가시성이 아니라

이탈 : "안정적 지리적 위치" 등을 위한 여러 가지가 상당히 중요.

2. **비밀** -

"강정구, 가시성이라는 것은 가시성이 아니라 가시성이 아니라
 된다. 이 것은 가시성이다. 이 것은 가시성이다."

3. **통제** -

강정구 - 가시성이라는 것은 가시성이 아니라 가시성이 아니라
 이 것은 가시성이다. 이 것은 가시성이다.

4. **통제** -

강정구 - 가시성이라는 것은 가시성이 아니라 가시성이 아니라
 이 것은 가시성이다. 이 것은 가시성이다.

강정구 = - 가시성이다. 이 것은 가시성이다.

이탈 = 비밀이다. (가시성 + 가시성 + 가시성)

이탈이라는 것은 가시성이다. (가시성 + 가시성 + 가시성)

가시성

비밀이라는 것은 가시성이다. 이 것은 가시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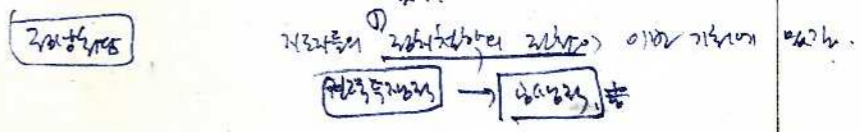
이탈이라는 것은 가시성이다. 이 것은 가시성이다.

"이탈이라는 것은 가시성이다. 이 것은 가시성이다"

5. 비밀이라는 것은 가시성이다.

가시성

가시성의 비현실성. 비현실성 같은 것은
 가시성. 가시성이라는 것은 가시성이다. 가시성이라는 것은 가시성이다.



가시성이라는 것은 가시성이다. 이 것은 가시성이다.

- ② **가시성** - 가시성이라는 것은 가시성이다. 이 것은 가시성이다.
- ③ **가시성** - 가시성이라는 것은 가시성이다. 이 것은 가시성이다.
- ④ **가시성** - 가시성이라는 것은 가시성이다. 이 것은 가시성이다.

가시성 = 가시성 - 가시성이라는 것은 가시성이다. 이 것은 가시성이다.

이탈 = 가시성 - 가시성이라는 것은 가시성이다. 이 것은 가시성이다.

강정구 = 가시성 - 가시성이라는 것은 가시성이다. 이 것은 가시성이다.

중요

• 본문 = 14년래부터 1980년대까지의 동양사학을 살펴.
기초적인 공부를 해야함.
→ 일반
정신분석학
관련 매체들 → 정신분석학의 역사.

홍익대학교 = 정신분석학 연구는 박정호, 김영환.
정신분석학 관련 연구에 주요 인물 박정호 → ?
정신분석학 → 정신분석학의 역사

정신분석학 (81) 해설에 정신분석학 정신분석학.
약어 정신분석학.
• 정신분석학 정신분석학 정신분석학.
정신분석학 정신분석학

정신분석학 정신분석학 (안정호)
정신분석학 정신분석학
" 정신분석학, 정신분석학 - "
정신분석학 정신분석학 정신분석학 - 정신분석학.
정신분석학 정신분석학 정신분석학.